

대불, 명지녹산, 오송생명 등 3곳 산업단지에 재생사업 신규 추진

- '25년부터 산단별 재생사업지구계획 수립... 산단 내 도로, 주차장, 공원 등 확충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대불국가산업단지, 명지녹산국가산업단지, 오송생명과학산업단지 등 3개 산업단지에 대해 도로, 공원 등을 확충하여 활성화를 도모하는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 공모를 통해 신규 재생사업 대상지를 선정한 것으로, 착공 후 20년 경과한 노후산업단지 중에서 소관 지자체가 신청하였으며 산업단지·도시계획·교통 등 민간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서면 검토 및 종합평가를 거쳐 선정하였다.
- 산업단지별 내부 기반시설·환경 개선을 추진하게 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불국가산단은 준공한 지 27년이 지나 도로, 공원 등이 낙후되고 주차공간 등이 부족해짐에 따라 도로·보도를 확장하고 노상주차장을 확충하는 한편, 공원·녹지도 재조성하여 산단 내 근로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 준공 후 22년이 경과한 명지녹산국가산단 또한 산단 노후화 및 근로자 편의시설과 녹지·공원 등 휴식공간 부족에 따라 산단 내 완충녹지를 활용한 산책로 조성, 개인형 이동수단 연계 등 통해 근로자 편의를 증진한다.
 - 마지막으로, 오송생명과학산단은 산단 내 교통혼잡, 주차난, 휴식공간 부족 등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로 확장 및 구조개선, 노상주차장 설치, 공원 조성 등으로 쾌적한 산업환경 조성을 도모한다.

산단명(가나다순)	위치	사업면적*	주요 계획(안)*
대불국가산단	전남 영암군 삼호읍 일원	11,591천㎡	도로·보도 확장 및 노상주차장·공원·녹지 확충 등 통해 근로환경 개선
명지녹산국가산단	부산시 송정동 일원	2,084천㎡	산단 내 녹지 확충, 보도 확장 및 개인형 이동수단 연계 등 통해 근로자 편의 증진
오송생명과학산업단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일원	3,983천㎡	도로 확장 및 구조개선, 노상주차장 설치, 공원 조성 등 기반시설 재정비

* 공모 시 제출한 내용으로, 확정된 계획이 아니며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수정·보완 예정

- 이번에 재생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산업단지는 '25년부터 소관 지자체에서 재생사업지구계획 수립을 착수할 예정이며, 계획 수립 완료 및 재생사업 지구 지정 이후 기반시설 확충 등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 한편, 동 사업은 토지이용계획 변경, 기반시설 확충·개량을 통한 인프라 개선, 업종배치계획 재수립 등으로 노후화된 산업단지 재정비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 '09년 도입된 후 그간 46곳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도로, 주차장, 공원·녹지 등 기반시설 신설·확충에 필요한 사업비 일부를 국고로 보조 (50%)*하고 있다.
- * 사업지구 규모별 한도: 100만㎡미만 100억, 200만㎡미만 200억, 330만㎡ 이하 350억
- 국토교통부 안세창 국토정책관은 “노후 산업단지 대상으로 신규 산업수요 대응과 부족한 근로자 편의시설·열악한 근로환경 극복 등을 위해 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면서, “지자체에서 수요가 있을 경우 추가 선정을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국토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민태 (044-201-3674)
	산업입지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오지민 (044-201-3663)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 추진 배경

- 산업단지는 국가·지역 산업의 거점이나, 노후화로 경쟁력 저하 우려
 - 변화한 산업·지역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산단 내 기초 인프라(주차장, 도로 등) 및 토지이용계획 등 정비·확충 필요

□ 제도 개요

- (개념) 산업구조의 변화, 산업시설의 노후화 및 도시지역 확산 등으로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의 정비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
- (대상) 착공 후 20년 이상 경과된 산업단지 등
- (주요내용) ①토지이용계획 변경을 통한 복합용지* 확충으로 편의·복지 시설 증대 기반 마련, ②도로, 주차장, 공원·녹지 등 기반시설 신설·개량을 통한 인프라 개선, ③업종배치계획 재수립으로 업종 고도화
 - * 산업시설(공장 등)과 지원·상업 등 편의시설(식당·카페, 문화·복지시설 등)이 함께 입주할 수 있는 토지
- (절차) 재생사업지구계획 수립(지자체) → 관계기관 협의 → 산업단지 관련 위원회 심의 → 재생사업지구계획 승인·고시 → 사업 착수

□ 추진현황

- '09~'23년까지 총 46곳 산단을 선정하여 사업 추진 중
 - '09.12월 재생사업 도입(「산업입지법」 개정)하여 '17년까지 22곳* 산단 선정
 - * ('09) 1차 시범 4곳, ('14) 2차 4곳, ('15) 3차 9곳, ('17) 4차 5곳
 - 이후 부처별 개별사업 연계를 위해 경쟁력강화사업* 도입(「노후거점산단법」 제정, '15.1월), '19~'23년간 24곳 산단** 선정
 - * 지역별 거점산단과 일부 산단을 연계하여 산단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 및 사업 추진
 - 산업단지 환경개선(국토부·산업부), 스마트·그린화(국토부·산업부·중기부·환경부 등), 창업·고용 여건 개선(고용부·여가부 등) 등 8개 부처 39개 지원사업 선정 또는 평가시 가점 등 혜택
- ** ('19) 5차 5곳, ('20) 6차 5곳, ('21) 7차 6곳, ('22) 8차 4곳, ('23) 9차 4곳

□ 주요 재생사업 모델(안)



주요 사업계획도(안) - 예시1



주요 사업계획도(안) - 예시2